

#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2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. 19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개정이유

「하천법」 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변경함(안 제2조).
- 나.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을 정함(안 제6조).
- 다. 변상금의 사전 징수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하천법」 및 「하천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 - 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 - (2) 입법예고 : 2008. 12. 19. ~ 2009. 1. 4. / 접수 의견 없음

##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천법」 제3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, 하천수 사용료, 변상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정기준) 「하천법」 제37조의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은 「하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영 별표 3 제2호가목·나목, 제4호가목·나목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.

제3조(점용료등의 징수시기) 점용료등(“점용료등”이란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,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년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
2.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개시 후 3개월 이내

제4조(점용료등의 분할납부) 점용료등은 영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 4회 균등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점용료등의 조정)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의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·징수한다.

제6조(점용료등의 감면)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하천점용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: 전액 면제

2. 하천점용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: 100분의 80 감경
3. 하천점용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: 100분의 50 감경

제7조(변상금의 부과)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②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.

제8조(허가 수수료) 「하천법」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(자치구청장에게 사무 위임된 경우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말한다)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「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」 및 「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」에 따라 하천관리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제10조(징수교부금)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만 위임한 경우 : 징수금액의 100분의 30
2. 점용허가업무 및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 : 징수금액의 100분의 50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## 점용료 등 산정기준(제2조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									
1. 토지(하천부지)의 점용	<p>가.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/100</p> <p>나.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/100. 다만,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 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</p>									
2. 선박 등의 운항	<p>가.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(차량도선은 배액)</p> <p>1) 국가하천 : 월액 20,000원</p> <p>2) 지방하천 : 월액 10,000원</p> <p>※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</p> <p>나. 5톤 이하 유선</p> <table><tr><td>지역등급</td><td>동 력 선</td><td>무동력선</td></tr><tr><td>국가하천</td><td>월 100,000원</td><td>월 50,000원</td></tr><tr><td>지방하천</td><td>월 60,000원</td><td>월 30,000원</td></tr></table> <p>※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/10 가산</p>	지역등급	동 력 선	무동력선	국가하천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지방하천	월 60,000원	월 30,000원
지역등급	동 력 선	무동력선								
국가하천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							
지방하천	월 60,000원	월 30,000원								
3. 그 밖의 점용 및 사용	「하천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									

[별표 2]

점용료등의 조정 산식(제5조 관련)

산출 점용료의 증가율	납 부 할 점 용 료
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0/100+(증가율-10/100)×300/1,000}]
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3/100+(증가율-20/100)×100/1,000}]
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6/100+(증가율-50/100)×60/1,000}]
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9/100+(증가율-100/100)×30/1,000}]
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22/100+(증가율-200/100)×10/1,000}]
500퍼센트 이상	전년도점용료+(전년도점용료× 25/100)

변상금 징수 통지서

대 상 자	① 성 명 (법인의 명칭)	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				
	③ 주 소		④ 전화번호				
⑤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							
위반 행위	재산의 표시			점유 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 (원)	비고
	소재지	지목	지 적 (㎡)				

「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·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구청장 (인)

귀하

## 관계법령

### 하 천 법

[일부개정 2008.3.21 법률 제8976호]

**제37조 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**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(私有)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·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### 하천법 시행령

[전부개정 2008.4.3 대통령령 제20763호]

**제42조 (점용료등의 징수)**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

하게 할 수 있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낮출 수 있다. 다만,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

**제43조 (변상금의 징수)**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(이하 "변상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44조 (점용료등의 감면)**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"공용·공공용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
2.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(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
3.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·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
5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경우
6.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

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전액 면제



2.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2분의 1 감면
3.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**제107조 (과태료의 부과 등)**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.

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, 지방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이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세법

[일부개정 2008.9.26 법률 제9133호]

**제41조 (징수유예등의 요건 <개정 1994.12.22>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·분할고지·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(이하 "징수유예등"이라 한다)를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1978.12.6, 1994.12.22>

1. 풍수해·낙뢰·화재·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
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
3.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
4.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#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[제정 2007.12.21 법률 제8725호]

##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

**제16조 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**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7조 (과태료의 부과)**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, 과태료 금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8조 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

**제19조 (과태료 부과 제척기간)**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**제20조 (이의제기)**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

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

**제21조 (법원에의 통보)**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
2.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2조 (질서위반행위의 조사)**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
2.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

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

**제23조 (자료제공의 요청)**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24조 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이 조에서 "증가산금"이라 한다)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86조를 준용한다.